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조 7,697억 원 규모, 전년 대비 8.2%↑ -
-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피지컬AI(미래대응기금) 포함 152조 4,328억 원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6조 원) 도입,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취약청년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일(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하였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 (기획처·미래대응기금) 아동기본수당(2조 9,272억 원), 아이맞이지원금(6,981억 원), 피지컬AI 도입·실증(377억 원) 총 3개 사업(3조 6,630억 원)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②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③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④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⑤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I)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한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개편('15년) 이후 최대인 6.7% 인상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348만 명), 부부감액 비율 축소(234만 명),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11만 명)을 반영하여 예산이 11% 증가('26년 23.1조 원→'27년 25.7조 원)하였다.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56만 원('26) → 68.4만 원('27), 최대 12.4만 원 추가지원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56만 원('26) → 64.6만 원('27), 최대 8.6만 원 추가지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

둘째,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6조 원)」를 신설하고, 지역 의사제(49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448명)를 전국(서울 제외)에서 실시한다.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도입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한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확대와 함께 인구 감소지역에 '취약지 돌봄센터'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및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하여 4.9% 인상한다.

넷째,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회복지원과 만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 기존의 양육지원급여를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다섯째,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등 AX·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퍼지컬AI 돌봄로봇 도입·실증 등 복지·돌봄 혁신과 전국민 AI 기본의료를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1.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2. 2027년 달라지는 모습
 3.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선
 4.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

< 담당부서 >

담당 부서 <총괄>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044-202-2320)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044-202-2321)
<생계급여> <긴급복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김은영	(044-202-3050)
		담당자	사무관	백수민	(044-202-3066)
		담당자	사무관	박영호	(044-202-3058)
<의료급여>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강준	(044-202-3090)
		담당자	사무관	배윤영	(044-202-3097)
<기초연금>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책임자	과 장	박나연	(044-202-3680)
		담당자	사무관	김관호	(044-202-3681)
<장애인연금>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044-202-3280)
		담당자	사무관	방재호	(044-202-3321)
		담당자	사무관	안미경	(044-202-3328)
<자활사업>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환	(044-202-3070)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044-202-3073)
<그냥드림>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044-202-3250)
		담당자	사무관	이홍남	(044-202-3251)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발굴> <희망드림꾸러미>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044-202-3120)
		담당자	사무관	정진경	(044-202-3136)
		담당자	사무관	이형주	(044-202-1753)
		담당자	사무관	문제숙	(044-202-3132)
<국가자살대응실> <자살예방상담전화>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재우	(044-202-3349)
		담당자	서기관	조성원	(044-202-3892)
		담당자	사무관	주정민	(044-202-3899)
<마약 중독 치료>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송명준	(044-202-3870)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044-202-3871)
<입·퇴원절차 개선> <정신질환자 돌봄>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경미	(044-202-3660)
		담당자	사무관	박희정	(044-202-3866)
		담당자	사무관	김종진	(044-202-2981)
<지필회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재	(044-202-1920)
		담당자	사무관	전원호	(044-202-1911)
<지역주도 공백해소>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구	(044-202-1930)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044-202-1931)
<고위험 산모·신생아> <중환자>	지역필수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경순	(044-202-1940)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044-202-1945)
		담당자	사무관	김제중	(044-202-1941)
<중증외상 재난의료> <응급이송>	공공의료정책관 재난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성원	(044-202-2915)
		담당자	사무관	김수연	(044-202-2528)
		담당자	사무관	송진성	(044-202-2525)
<공공심야약국>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명철	(044-202-2490)
		담당자	사무관	강현진	(044-202-2486)

<지역의사 등>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책임자	과 장	민차영	(044-202-1960)
		담당자	사무관	이수빈	(044-202-1961)
<필수의료 전공의>	의료자원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연희	(044-202-1720)
		담당자	사무관	송현철	(044-202-1735)
<필수의료 간호사>	의료자원정책관 간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하진	(044-202-1760)
		담당자	사무관	최진선	(044-202-1758)
<의료사고 안전망>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044-202-2470)
		담당자	사무관	이보미	(044-202-2474)
<국립대병원>	공공의료정책관 국립대병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도균	(044-202-2510)
		담당자	사무관	이재혁	(044-202-2501)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형기	(044-202-2530)
		담당자	사무관	이영은	(044-202-2541)
<통합돌봄>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	책임자	과 장	변성미	(044-202-3590)
		담당자	서기관	윤종현	(044-202-3592)
<취약지돌봄센터>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혜은	(044-202-3580)
		담당자	서기관	이라향	(044-202-3581)
<노인일자리>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명희	(044-202-3470)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044-202-3477)
<안심서비스>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귀훈	(044-202-3450)
		담당자	사무관	정수진	(044-202-3459)
<치매 관리>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최승현	(044-202-3530)
		담당자	서기관	김미경	(044-202-3531)
<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가족>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이고운	(044-202-3340)
		담당자	서기관	임선호	(044-202-3352)
		담당자	사무관	최용혁	(044-202-3341)
		담당자	사무관	김미선	(044-202-3350)
<청년일자리> <인건비가이드라인>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책임자	과 장	반윤주	(044-202-3270)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044-202-3266)
		담당자	사무관	신춘호	(044-202-3276)
<학대피해아동>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양진혁	(044-202-3380)
		담당자	사무관	한진택	(044-202-3382)
<회복청년>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책임자	과 장	이화영	(044-202-3701)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044-202-3702)
<청년 첫 보험료>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명숙	(044-202-3450)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044-202-3613)
<아동기본수당>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찬수	(044-202-3410)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044-202-3429)
<양육지원> <원가정복귀> <방학틈새돌봄>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구미정	(044-202-2875)
		담당자	사무관	안유리	(044-202-3441)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044-202-3432)
		담당자	주무관	신동학	(044-202-3444)
<아이맞이지원금> <가임력 검사> <영유아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044-202-3390)
		담당자	사무관	류지은	(044-202-3397)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044-202-3403)
		담당자	사무관	곽영남	(044-202-3393)
		담당자	사무관	김상태	(044-202-3399)
		담당자	사무관	박성진	(044-202-3391)

<연명의료> <호스피스>	보건의료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모두순	(044-202-2450)
		담당자	사무관	안현빈	(044-202-2455)
<간병서비스>	의료자원정책관 간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지웅	(044-202-2451)
		책임자	과 장	조하진	(044-202-1760)
<복지돌봄 AX>	사회서비스정책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유민	(044-202-1763)
		책임자	과 장	서민수	(044-202-3240)
<복지돌봄 AX>	사회서비스정책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현철	(044-202-1511)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2-2610)
<비대면진료> <의료정보교류>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진균	(044-202-2607)
		담당자	주무관	이에나	(044-202-2606)
<AI 고속도로> <일차의료AX> <데이터허브>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044-202-2620)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044-202-2947)
<청년유니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현준	(044-202-2635)
		책임자	과 장	김건훈	(044-202-2320)
<제약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제약바이오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구재관	(044-202-2911)
		책임자	과 장	오성일	(044-202-2270)
<화장품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홍석록	(044-202-2967)
		담당자	사무관	이지원	(044-202-2969)
<외국인환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책임자	과 장	김유라	(044-202-2940)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044-202-2945)
<R&D 총괄>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책임자	과 장	주 철	(044-202-2980)
		담당자	주무관	이정민	(044-202-2984)
<R&D 총괄>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책임자	과 장	백영하	(044-202-2920)
		담당자	사무관	권용환	(044-202-2934)

I.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전체 모습

(단위: 조 원)

구 분		2026년 예산 (A)	2027년 정부안 (B)	증감액 (B-A)	%
◇ 정부 전체 총지출(a)		727.9	820.9	93	12.8
◇ 보건복지부 총지출(b)*		137.5	148.8	11.3	8.2
■ 보건복지부 비율(%)	b/a	18.9	18.1	-	-

*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조 원(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 도입실증) 포함시 총 152.4조 원

□ 2027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820.9조 원, 전년 대비 12.8% 증가

○ 복지부 총지출은 148.8조 원, 전년 대비 8.2% 증가

*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조 원 포함 시(152.4조 원) 전년 대비 14.9조 원(10.9%) 증액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억 원)

구 분	2026년 예산 (A)	2027년 정부안 (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 출(A+B)	1,374,949	1,487,697	112,748	8.2
◇ 예 산 (A)	779,419	844,140	64,721	8.3
◇ 기 금 (B)	595,530	643,557	48,027	8.1
◇ 사회복지	1,184,796	1,282,737	97,941	8.3
■ 기초생활보장	205,849	247,292	41,444	20.1
■ 취약계층지원	59,979	66,895	6,916	11.5
■ 공적연금	555,187	605,166	49,979	9.0
■ 아동	61,164	32,071	△29,093*	△47.6
■ 노인	290,922	318,450	27,529	9.5
■ 사회복지일반	11,696	12,862	1,166	10.0
◇ 보 건	190,153	204,960	14,807	7.8
■ 보건의료	46,912	50,297	3,386	7.2
■ 건강보험	143,241	154,662	11,421	8.0

* '27년부터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 편성

II. 예산안 주요 내용

1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①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 (생계급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준중위 소득을 맞춤형 급여 개편('15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

○ 월 최대 생계급여액 5.5^(1인가구)~13.9만원^(4인가구) 인상

* (생계급여액) 1인가구 82.1만 원 → 87.6만 원 / 4인가구 207.8만 원 → 221.7만 원

○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가구(2만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27下)

■ 생계급여: ('26) 9조 1,727억 원 → ('27 정부안) 10조 8,004억 원(+1조 6,277억 원)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권자 확대(+3만 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 강화(+13.8만 명)

■ 의료급여: ('26) 9조 8,400억 원 → ('27 정부안) 12조 2,973억 원(+2조 4,573억 원)

□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하위 차등지급(348만명), 부부감액 비율 축소(234만명),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11만명) 반영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56만 원('26) → 68.4만 원('27), 최대 12.4만 원 추가지원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56만 원('26) → 64.6만 원('27), 최대 8.6만 원 추가지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

■ 기초연금 지급: ('26) 23조 1,141억 원 → ('27 정부안) 25조 6,530억 원(+2조 5,389억 원)

□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1급·2급 전체 및 3급 중복장애) → 개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전체로 확대*

* 대상자 34.5→61.2만 명(+26.7만 명), 예산 1,999억 원 추가

■ 장애인연금: ('26) 9,071억 원 → ('27 정부안) 1조 1,194억 원(+2,123억 원)

□ (자활사업)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 및 생활지원을 위해 참여자 규모를 7.5만 명까지 확대(+3천 명)하고, 유형별 급여도 3.7% 인상*

* 급여(월): (근로유지형)33,940 → 35,200원 (사회서비스형)57,840 → 59,980원 (시장진입형)66,080 → 68,520원

■ 자활사업: ('26) 8,409억 원 → ('27 정부안) 8,931억 원(+522억 원)

② 빈틈없이 선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드림 3종 패키지



- (**우선드림** 긴급복지) 급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위기* 해소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신규** 생계지원(30만 원) 우선 지급
 * 분유·기저귀 등이 시급하나 구매 어려움, 교통비·통신비가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 등
 -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지급: ('27 정부안) **53억 원**(신규)
 - (**그냥드림**)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 전국 운영 지원(150→300개소, 푸드뱅크·마켓 등)
 - 그냥드림: ('26) 73억 원 → ('27 정부안) **89억 원**(+16억 원)
 - (**찾아드림** 위기가구 발굴) 지역사회 공무원·이웃주민 등의 참여, 위기정보 연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제공
 - (**신규** 발굴 포상)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한 지방정부·공무원 및 지역주민
 성과 포상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적극 지원
 - * 우수읍면동 70개소(총 6억 원), 공무원 우수사례 30개(총 2억 원), 주민 우수사례 40개(4천만 원)
 - (**신규** 희망드림꾸러미)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에 최초 방문상담 시,
 식료품 세트 등 생활용품(2.5만 원) 지원(1회)
 - (사회적 고립 예방)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 신속 발굴 및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연계·제공
 - * 금융연체,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 **공통**안부확인, **청년**마음·일상회복, **중장년**관계개선, 건강관리, 경제자립, **노인**돌봄연계, 사회참여, 안전확인
- 위기가구 발굴활동 보상: ('27 정부안) **8.4억 원**(신규)
 - 희망드림꾸러미: ('27 정부안) **7.5억 원**(신규)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26) 75억 원 → ('27 정부안) **82억 원**(+7억 원)

③ 자살예방 · 중독치료 등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 (자살예방)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13억 원)하고 관련 상담 인력 등을 확충**

* AI상담지원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증가하는 자살예방상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자살예방 상담전화 콜센터 시스템 구축

**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인력 확충(150명→200명),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967명→1,509명)

- **신규** AI 기반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도입(+8억 원)
- **신규**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을 위한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추진(+10억 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26) 736억 원 → ('27 정부안) **947억 원**(+211억 원)

- (마약류 중독 치료) **신규**(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마약 투약사범 전담치료연계 및 회복지원의 공적 책임강화 위한 시범사업 도입(+22억 원)

* ▲「전담치료기관」에 전담인력 배치 → 기소유예, 집행유예, 교정시설 출소자 치료의뢰 및 전문치료
▲치료 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전담인력 배치 → 집중 사례관리(단약·상담 등)로 회복 지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수혜인원 확대(1,000명→1,500명, +7억 원) 및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충(11개소→13개소)

■ 중독관리 지원체계 구축: ('26) 97억 원 → ('27 정부안) **134억 원**(+37억 원)

- (**신규** 정신질환자 지원·관리) 비자의입원 병원 이송 체계를 개선*하고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도입(+17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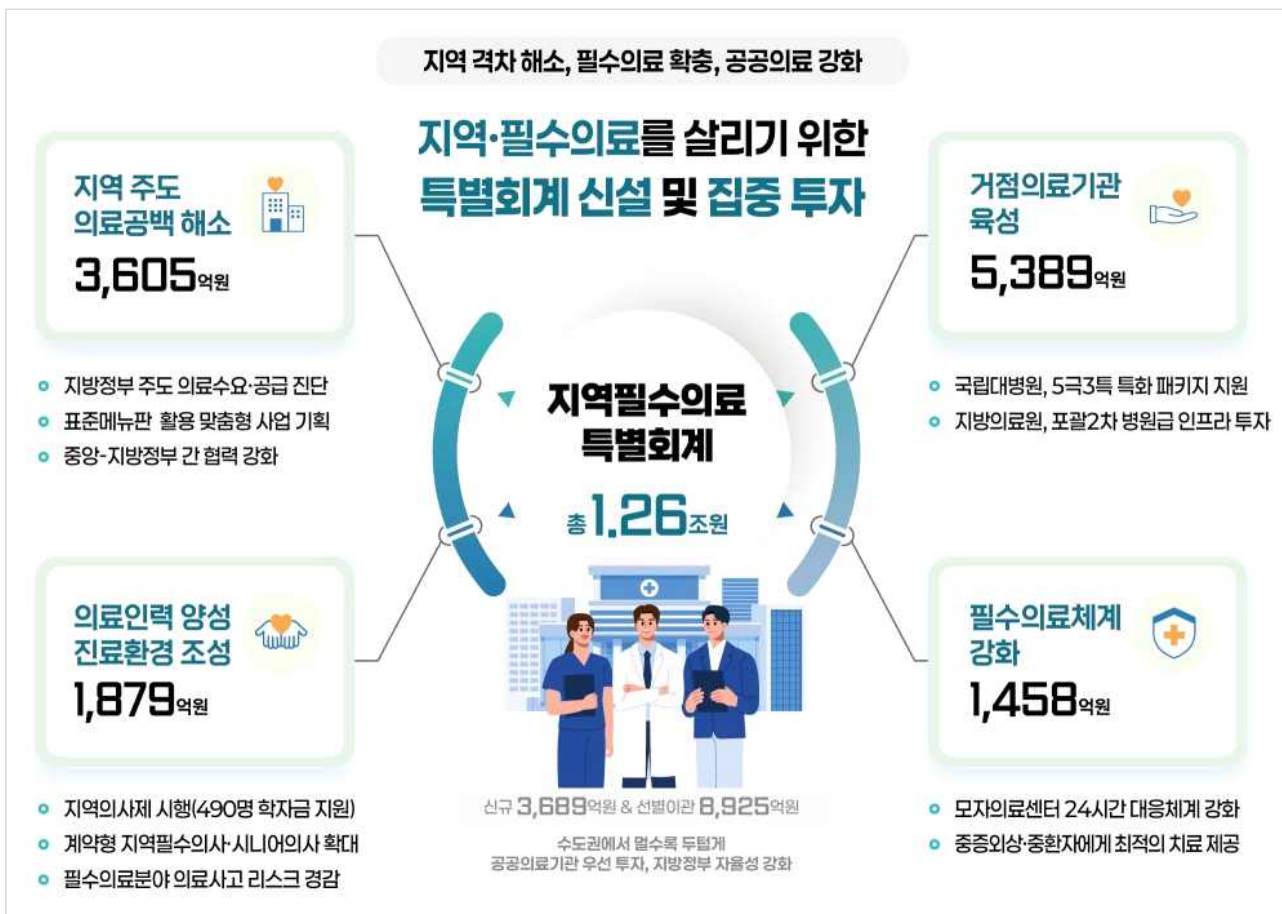
* 공공이송·치료비 지원 등 공적 지원 강화로 정신질환자 가족 등의 부담 완화

■ 정신질환자 지원·관리: ('27 정부안) **17억 원**(신규)



①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 1.26조 원 신설

-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필수医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회계를 신설하여 지역 필수의료에 집중적·안정적 투자 기반 마련
- (총규모) 신규 사업(3,689억 원) 편성 및 일반회계 등 기존 관련 사업 (8,925억 원, +854억 원) 이관 → 특별회계 총 1.26조 원(+4,543억 원)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27 정부안) 21개 사업 1조 2,614억 원(+4,543억 원)
 - ('27 신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등(+3,689억 원)
 - (이관) 일반회계, 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既 사업 8,925억 원(+854억 원)
- (투자방향)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원칙으로 지역·필수의료에 집중 투자



②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강화

- (**신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방정부가 지역별 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기획·시행(3,605억 원)
 -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맞춤형 사업을 선택·추진하고, 중앙정부는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지원
 - * 야간·휴일 진료 협력체계, 지역 일차의료 기능 강화, 도서·벽지 진료·이송체계 구축 등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27 정부안) 3,605억 원(신규)
- (**모자·외상 등 필수의료 강화**) 응급환자가 지역 안에서 적시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 (고위험 산모·신생아) 24시간 대응체계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전문¹천만 원, 전공⁵백만 원/월, 서울 제외) 지원(+158억 원), 중증모자의료센터 2개소 확대(2개소→4개소, +15억 원), 전담이송체계 고도화(+3억 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26) 154억 원 → ('27 정부안) 307억 원(+153억 원)
 - (중증외상) 중증외상환자에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외상센터의 운영지원 확대(+13억 원)
 -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26) 628억 원 → ('27 정부안) 642억 원(+13억 원)
 - (중환자) 한정된 의료자원인 중환자실 병상·장비의 가용 역량 파악, 효율적인 배분·관리 위한 중환자 진료정보시스템 구축(+12억 원)
 -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26) 10억 원 → ('27 정부안) 22억 원(+12억 원)
 - (응급)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지원을 위해 닥터헬기 운영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30억 원)하고, 119구급차 기능 강화(+54억 원)
 -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26) 264억 원 → ('27 정부안) 301억 원(+37억 원)
 - 119구급대 지원: ('26) 319억 원 → ('27 정부안) 338억 원(+19억 원)
 - (심야약국) 심야 및 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지정 확대(240개소→265개소(+25), +7억 원)
 -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26) 57억 원 → ('27 정부안) 64억 원(+7억 원)

③ 지역·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신규 지역의사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 양성
 -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490명)에게 등록금·실습비(31억 원)와 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 운영(13억 원)
 - * 중앙 지역의사지원센터 1개소, 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 8개소
 -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27 정부안) 44억 원(신규)
- (취약지 인력 확충)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인력의 취약지 근무 여건 개선 및 채용 지원(+68억 원)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전국 확대(6개 시도, 136명 → 15개 시도^{서울 외}, 448명),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160명 → 220명) 및 재진입 교육 실시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26) 163억 원 → (‘27 정부안) 231억 원(+68억 원)
- (필수의료 전공의·간호사) 비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수련수당 확대(월 100만 원 → 120만 원, +77억 원),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지원 등(+7억 원)
 - * 소아·응급 등 8개 필수과목 전공의 및 소아·산부인과 전임의
 -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26) 379억 원 → (‘27 정부안) 474억 원(+77억 원)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지원 등: (‘26) 20억 원 → (‘27 정부안) 27억 원(+7억 원)
- (의료사고 안전망) 책임보험 확대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지원
 - (필수의료보험)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위험 경감을 위해 의료사고 고액 배상보험료 지원대상* 확대(+11억 원)
 - * ① 산과 + 모자의료센터 전담의, ② 소아외과계열 전문의, ③ 전공의(소아·응급 등 8개 필수과목) ④ 응급실 전담의(전국 권역응급센터·소아전문응급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 일부 지역응급센터) → (‘27년 확대)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지원대상 확대
 -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26) 82억 원 → (‘27 정부안) 93억 원(+11억 원)
 - (의료분쟁)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민사), 형사특례(기소제한, 임의적 형 감면) 도입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강화(인력 22명 증원, +45억 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26) 231억 원 → (‘27 정부안) 276억 원(+45억 원)

④ 5극3특 지역의료 거점의료기관 육성

- (국립대병원) 5극3특 내 완결적 중증치료 제공 거점인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우수 인력 채용, 시설·장비 고도화 등 지원(+1,397억 원)
 - (신규 5극3특 특화) 지역별 의료수요와 병원별 강점 고려, 국립대병원(9개소)에 특화분야 패키지(우수 의료진(명의) 채용, 기술협력교류 등) 지원(1,188억 원)
 - (신규 의료인력) 지역 국립대병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진료과 전문의 신규 채용 및 경력개발 지원, 장기재직 보상 강화(162억 원)
 - (의료 AI 전환)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통합하고 AI 활용기반을 확충하여 국립대병원을 의료 AI·R&D 혁신거점으로 육성(+75억 원)
 - (지역의료 협력체계)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진료협력 및 전담조직·인력 확대(+26억 원)
 - (인프라)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시설·장비(488억 원, 교육부로부터 이관) 및 중환자·수술 시설·장비 선진화(732억 원, 계속) 등 지원

-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26) 1,154억 원 → ('27 정부안) 2,551억 원(+1,397억 원)
- 국립대병원 지원 : ('27 정부안) 488억 원(교육부로부터 이관)

- (지방의료원 등) 중진료권 내 완결적 중등도 치료 제공 거점으로써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역량 강화 지원(+70억 원)
 - (인프라 지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시설 기능보강, 건립 등 인프라 투자 1,430억 원(+21억 원), 필수의료 운영 791억 원 지원
 - (신규 도약 지원) 지방의료원이 포괄2차 종합병원* 수준의 수술·중환자실 등 진료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 추진('27~'29년 총 489억 원 신규)

*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대부분의 의료문제 해결이 가능한 포괄성 갖추고, 입원 중심의 중등도 수준 진료역량을 갖춘 종합병원(26.7월 기준 195개소)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6) 2,280억 원 → ('27 정부안) 2,350억 원(+70억 원)

① 통합돌봄 현장 안착

- (지역특화서비스) 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 의료취약·인구 감소지역은 가산* 지원, 시·군·구 지원을 최대 10→16억 원으로 인상(+667억 원)

* 지역 통합돌봄 수요자 규모 반영, 의료취약·인구감소·초고령지역은 지원단가 1.2~1.5배 가산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26) 914억 원 → ('27 정부안) 1,558억 원(+644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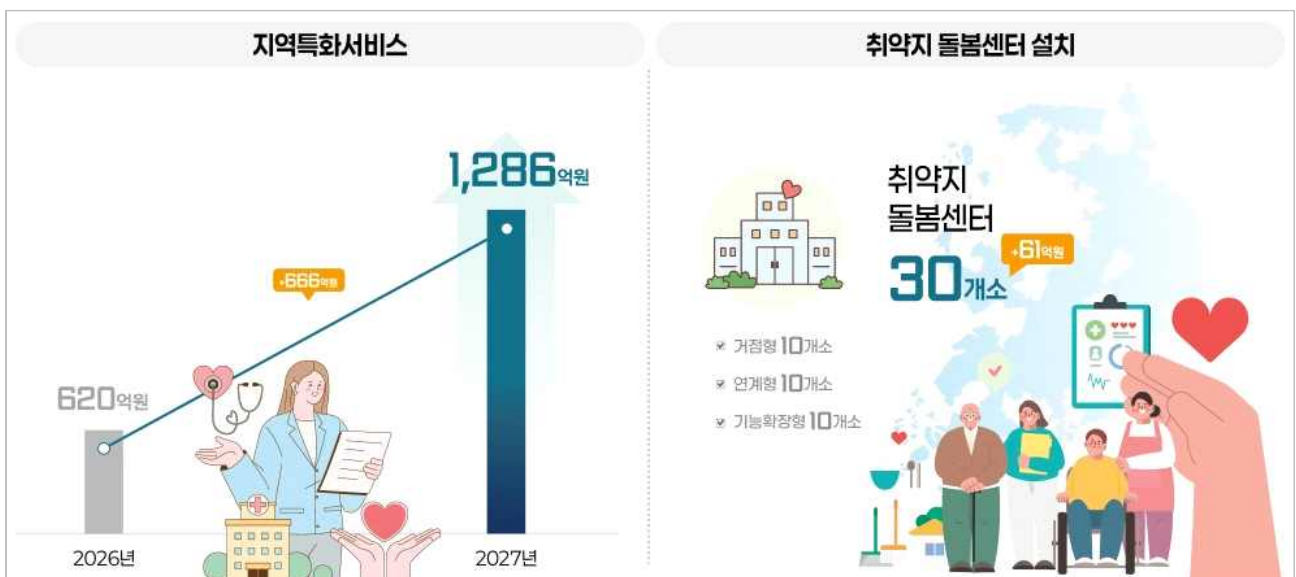
- (신규 취약지돌봄센터) 의료-요양-돌봄 복합 수요를 통합 제공할 기관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돌봄센터 설치·운영(30개소*, 개소당 1억 원~6억 원)

* 거점형 10개소, 연계형 10개소, 기능확장형 10개소

■ 취약지돌봄센터 실증 시범사업: ('27 정부안) 61억 원(신규)

- (신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비 등 도입(+2.5억 원)

■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27 정부안) 2.5억 원(신규)



② 일자리부터 돌봄까지 안심노후 지원

□ **(노인일자리)** 민간형·사회서비스형 노인일 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2.8만 개 확충(115.2만 개 → 118만 개)

* 공익형(70.9만 개/+415개), 사회서비스형(19.7만 개→21.5만 개/+1.8만 개), 민간형(24.6만 개 →25.6만 개/+1.0만 개)

**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사회참여활동(보육시설 봉사 등), 사회서비스형 경력·역량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제공(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민간형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현장실습 훈련 자원사업 노년친화기업기반 등)

○ 안전한 노인일 자리를 위해 사고예방·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전담인력 728명 추가 배치(613명→1,341명)

■ 노인일 자리: ('26) 2조 3,599억 원 → ('27 정부안) 2조 4,861억 원(+1,262억 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상황 감지하고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장애인 가정 내 ICT 장비* 설치 지원 확대(29.7만 개→31.7만 개, +2만 개)

*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 게이트웨이 등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6) 329억 원 → ('27 정부안) 363억 원(+33억 원)

□ **(치매관리체계)**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안전한 노후 생활 보장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전담인력 추가 배치(29명 → 61명)

○ 치매공공후견지원* 활성화를 위한 광역치매센터 인력 확충(130명→147명),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대상자 수 확대(300명→500명)

* 치매환자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청구·후견인 관리 등 지원

■ 치매관리체계구축: ('26) 1,849억 원 → ('27 정부안) 1,972억 원(+123억 원)

③ 장애인과 가족의 삶까지 두텁게 지원

□ (활동지원) 기본급여 지원대상 9천 명 확대(14만→14.9만 명) 및 시간당 단가 4.0% 인상(17,270원→17,960원)

○ 65세 도래 기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장기요양급여 간 선택권 부여('27.7월~)

* ('26) 65세 도래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서비스 전환(활동지원→장기요양)에 따른 감소분을 활동지원으로 보전 → ('27.7월) 65세 도래 기존 수급자는 활동지원 계속 수급 가능(단,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 ('26) 2조 8,164억 원 → ('27 정부안) 3조 1,508억 원(+3,343억 원)

□ (장애인일자리) 신규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500개) 등 장애인 일자리 2.6천 개 확대(3.6만 개→3.8만 개)

■ 장애인 일자리: ('26) 2,546억 원 → ('27 정부안) 2,793억 원(+246억 원)

□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1.15만→1.3만 명), 성인 주간 활동서비스(1.5만→2만 명)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 (24시간 개별) 34개소→40개소, (주간개별) 125개소→140개소, (주간그룹) 1,500명→1,800명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26) 4,565억 원 → ('27 정부안) 5,721억 원(+1,156억 원)

□ (장애아동가족) 발달재활서비스 대상(11만→11.6만 명) 및 중증장애아동 가구 연간 돌봄시간(1,200→1,320시간/연), 부모·가족 휴식지원(1.6만 명→1.8만 명) 확대

○ 신규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시간당 영아 2천 원, 유아 1천 원) 신설

■ 장애아동가족지원: ('26) 2,599억 원 → ('27 정부안) 2,812억 원(+213억 원)



4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반영

* (12개)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노인·아동 보호전문 기관(2종), 학대피해 노인·아동·장애인·장애아동 쉼터(4종), 자립지원전담기관,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 (준수율 100%)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26년 98.2%, +253억 원)
- (저연차 종사자)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 인건비 추가 인상 반영(+63억 원)
- (공통처우개선) ①가이드라인 100% 적용, ②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을 반영한 시설별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을 3.9% 적용(+377억 원)
- (시설확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시설에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추가(10개소→12개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26) 9,847억 원 → ('27 정부안) 1조 540억 원(+693억 원)

□ (정부보조사업 종사자)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을 (3.9%)에 1%p 추가 적용하여 4.9% 인상(+211억 원)

* ①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②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③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④통합사례관리, ⑤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지원, ⑥학대피해아동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⑦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지원, ⑧자살고위험군 발굴지원, ⑨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지원, ⑩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 정부보조사업(10종) 종사자 인건비: ('26) 2,242억 원 → ('27 정부안) 2,453억 원(+211억 원)

① 위기아동·청년의 회복 지원

-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155개소) 중 18개 기관에 영유아·장애 아동 특화시설 설치(18개소) 및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심층분석·연구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26) 739억 원 → ('27 정부안) **769억 원**(+30억 원)

-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기관*(2개소) 운영·지원 및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인건비 8.1% 인상)

* 아동의 원가정 복귀지원 및 조기 검사·치료 제공·연계, 중장기 보호조치 필요한 아동에게 시군구 행정 경계를 넘어 광역 차원의 적합한 보호 선택지 제공 지원(인천·경남)

■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26) 2억 원 → ('27 정부안) **3억 원**(+1억 원)

■ 보호대상아동 양육지원: ('26) 368억 원 → ('27 정부안) **397억 원**(+29억 원)

- (회복필요 청년)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①기초적 회복, ②사회참여 준비, ③회복형 사회참여 통합 지원

- (대상 확대)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관계·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확대
-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개소 확충(시도 17개소→시도 17개소+시군구 120개소)

■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26) 59억 원 → ('27 정부안) **397억 원**(+338억 원)



②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소득 보장

□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100세 시대 대비 청년층 장기 가입기간 확보를 위한 ‘**신규** 국민연금 첫보험료’ 지원(만 18세(’09년생), 45.1만 명)

○ 최초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조기에 생성하여 청년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수급하는 연금액 증가

■ 첫 보험료 지원: (’27 정부안) **189억 원**(신규)

□ (청년 일자리) 보건·복지 분야 공공일자리 8천 9백 개 발굴·확대(1.1만 →2만 개), 청년에게 일 경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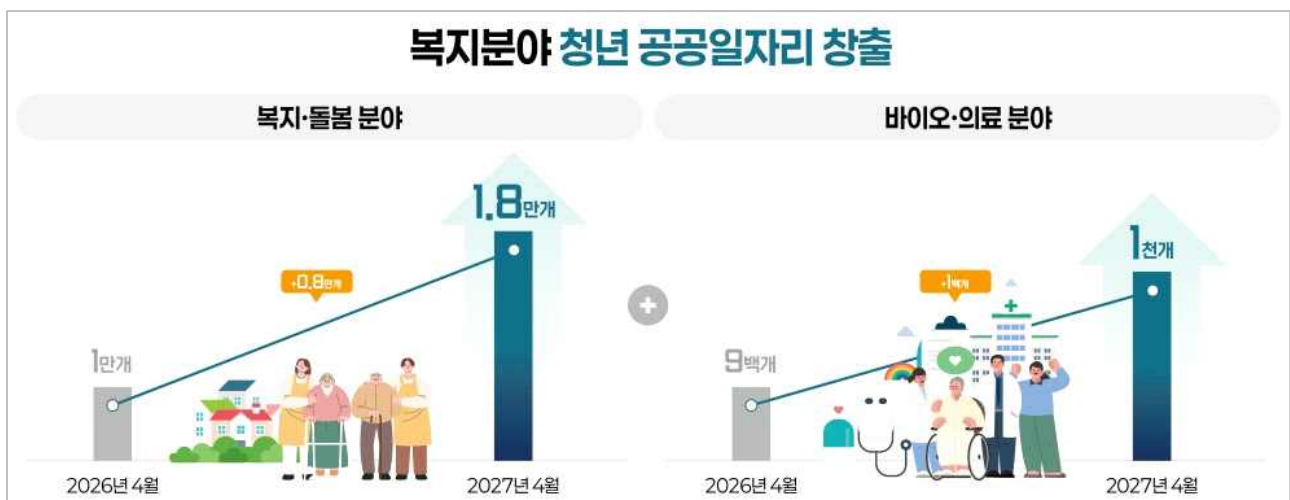
○ (복지·돌봄 분야)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일상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지·돌봄 일자리 +8천 8백 개(1만 개→1.8만 개)

*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5백 명), 청년특화 자활사업(+1천 명),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9백 명), 청년 회복프로그램 참가 및 관리(+6천 4백 명)

○ (바이오·의료 분야) 바이오, 의료데이터 등 성장성과 청년 선호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수요 기반 전문인력 양성 +1백 개(9백 개→1천 개)

*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18명),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확대(+22명), 바이오헬스 분야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16명), 바이오헬스 아카데미(+50명),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10명)

■ 청년일자리: (’27 정부안) **809억 원**(신규, 증액 포함)



① 출산·양육 패키지 지원

※ 기존 첫만남이용권 예산을 포함한 '아이맞이지원금 지원' 6,981억 원과 기존 아동수당 예산을 포함한 '아동기본수당 지급' 2조 9,272억 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통합·확대한 '출산·양육 패키지' 도입

⇒ ▲급여체계 단순화, ▲지원금액 대폭 확대, ▲다자녀·지역우대

※ '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아이맞이지원금)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통합하여 **신규**아이맞이지원금 신설(1~2천만 원, 1년간 4회 분할지급), 다자녀·지방에 살수록 확대* 지원

* (기본) 첫째1,000, 둘째1,200, 셋째이상1,500만 원 (지방우대) 첫째1,500, 둘째1,700 셋째이상2,0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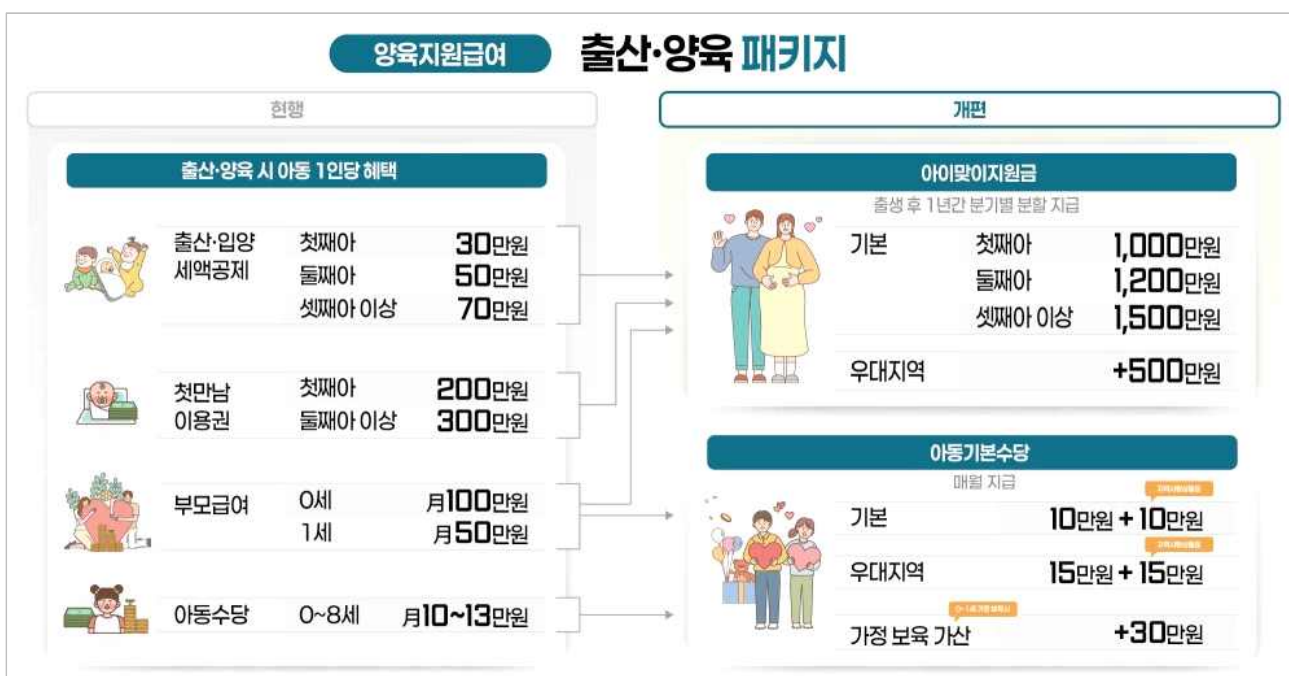
■ 아이맞이지원금 지원: ('27 정부안) 4,296억 원(신규)

○ (**신규**아동기본수당, 0~12세) 기존아동수당 대비 2~3배로 확대·개편하여,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 0~1세 가정보육은 월 30만 원 추가 지급

*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여 지급

** (기존) 월 10만 원~13만 원 → (변경) 기본 월 20만 원 / 지방우대 월 30만 원
아동기본수당 중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아동기본수당: ('27 정부안) 1,835억 원(신규)



② 산모부터 아이까지 돌봄 지원

- (임신지원) 남녀 가임력 검사비용 수혜인원 확대(36만→40만 명, +4만 명)
 -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개소 추가 확충(13개소→15개소) 및 전문 상담인력 증원(48명→63명, +15명)

■ 모자보건사업: ('26) 344억 원 → ('27 정부안) 369억 원(+25억 원)

- (영유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확대(+25억 원)

* 미숙아 체중별 최대 4백만 원 ~ 20백만 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 원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6) 42억 원 → ('27 정부안) 67억 원(+25억 원)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원			
선천성 질환이 있는 미숙아	11백만원	12백만원	17백만원	27백만원

- (기저귀·조제분유)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에 기저귀(9.6만→13만 명), 조제분유(1.4천 명→1.7천 명)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6) 514억 원 → ('27 정부안) 594억 원(+80억 원)

- (신규·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운영기간을 확대(5주→12주)하여 방학에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하는 아동에게 돌봄, 점심·저녁 식사 제공

■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 ('27 정부안) 279억 원(신규) * ('26년 예비비) 118억 원



③ 믿을 수 있는 간병,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 (연명의료) 공용윤리위원회* 확대(15 개소→ 17개소) 및 지원 강화(+12억 원), 온라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능 추가 등 시스템 고도화(+16억 원)

*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의료기관의 제도 참여 지원('26.7월 기준 15개 공용윤리위원회가 253개 의료기관 지원)

■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26) 49억 원 → ('27 정부안) 89억 원(+40억 원)

- (호스피스)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호스피스전문기관을 37개소 확대(193개소 → 230개소, 개소당 2천만 원~4천만 원 지원, +10억 원)

■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 ('26) 111억 원 → ('27 정부안) 121억 원(+10억 원)

- (신규 간병서비스) 급증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여, 표준교육과정 도입 등 간병서비스 품질관리 및 간병매칭 공적 플랫폼 구축(+14억 원)

■ 간병인력 양성 및 질관리: ('27 정부안) 14억 원(신규)

6

모두가 누리는 보건·복지 AX와 바이오 혁신

① 복지·돌봄 AI 대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

- (신규 기술혁신 가속화) 돌봄기술 R&D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증·사업화·현장 진입까지 연계, 제도·현장·기술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재가돌봄자택 내 돌봄 이용자의 독립적 일상수행, 시설돌봄시설 내 종사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국가 AI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및 기술개발(R&D): ('27 정부안) 145억 원(신규)

- (신규 돌봄로봇 실증·도입) '사람-로봇 통합 돌봄 환경 구축'하여 초고령화로 인한 복지·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24시간 공백없는 돌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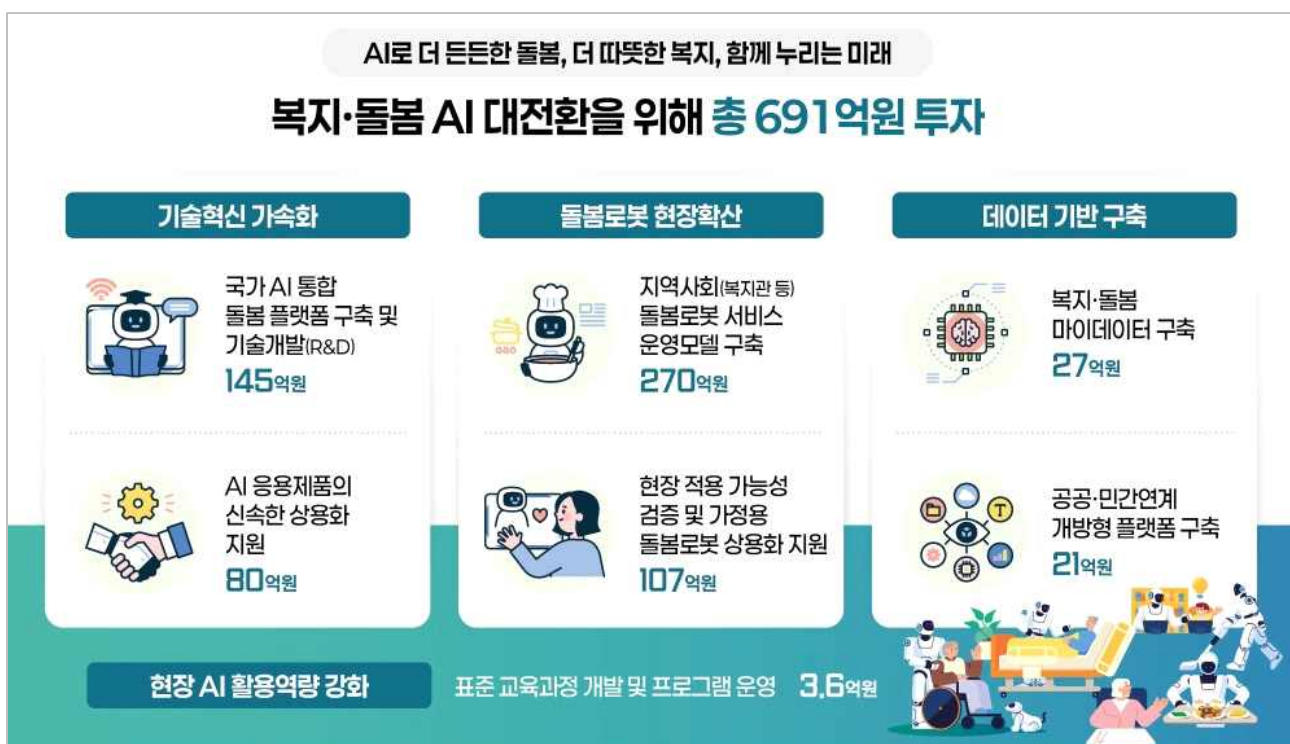
- 복지관 등 지역사회 돌봄현장(12개 거점)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스마트홈과 연결하여 대상 발굴→사례관리→서비스 제공까지 통합지원(120억 원)
* (예시) 스마트홈 데이터로 노인 보행능력 확인 → 보행보조로봇에 맞춤기능 설정 + 생활체육 프로그램 연계
-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10개소), 장애인거주시설(5개소)에 운반·배식 등 목적별 돌봄로봇을 배치하여 돌봄 종사자 부담 완화(150억 원)
- 인간 동작 등 돌봄 현장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돌봄로봇의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을 지원(107억 원)

■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현장확산 및 기반 구축: ('27 정부안) 377억 원(신규)

□ (신규 데이터기반 구축)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및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 국민이 자신의 복지·돌봄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관리·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신규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27억 원)
- 공공·민간 시스템, AI·IoT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분절된 돌봄 데이터를 통합·유통하는 신규 개방형 플랫폼 구축(21억 원)

■ 복지돌봄 AI 활용기반 구축(정보화): ('27 정부안) 65억 원(신규)



② 의료데이터 기반 AI 기본의료 혁신

- (**신규** 의료정보교류) 다른 병원 방문 시 QR인증으로 의료영상을 손쉽게 교류하기 위해, 환자 중심 의료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디지털 의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26) 5억 원 → ('27 정부안) **186억 원**(+180억 원)

- (**신규** 비대면진료) 의료기관-환자 간 진료중개 및 안전한 처방전 전송을 지원하는 비대면진료지원 및 전자처방전 공적전달시스템 구축

■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27 정부안) **41억 원**(신규)

- (**신규** AI고속도로)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간 AI인프라 공동 활용체계* 구축

* ▲영상판독 ▲의무기록 생성 ▲환자 의뢰서 요약 등 다양한 의료 AI를 탑재한 '공공의료 AI 플랫폼'(추론형 중앙 플랫폼)에 공공병원 연결

■ 공공의료 AI고속도로 구축: ('27 정부안) **71억 원**(신규)

- (**신규** AI데이터 허브) 보건 분야 연구자·기업에 데이터·분석환경을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저장소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공동활용 허브 구축

■ 보건의료 AI데이터 허브 운영: ('27 정부안) **45억 원**(신규)

- (**신규** 일차의료AX) 취약지 소재 필수진료과목 의원에 진료보조, 행정, 건강관리 등 '일차의료 AI 패키지'(바우처) 지원

■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AX 바우처 지원: ('27 정부안) **40억 원**(신규)



③ K -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청년 창업·생태계 활성화) ^{신규}청년 유니콘기업 육성 지원(13개社, 50억 원), 바이오 클러스터 간 버추얼 플랫폼* 구축(+43억 원)

* 분산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구·제조시설, 전문인력을 시스템 통해 공유하고, 협업·연계 촉진

■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26) 211억 원 → ('27 정부안) **266억 원**(+55억 원)

- (K-제약) 국내 신약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선진화하여 글로벌 의약품 경쟁과 공급망 위기 속 선제적 대응

- (임상전문기관 육성) 국내 임상시험 수탁기관*의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신규}'글로벌 탐티어 CRO 육성' 사업 도입(20억 원)

*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제약사로부터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임상 확대 추세('15년 27건 → '24년 74건)이나, 대부분 해외 CRO에 의존

-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글로벌 GMP인증 지원(시설·장비 개선)으로 국내 의약품 제조 및 수출 역량 강화(지원 기업 5개소→10개소, +40억 원)
- (공급망 안정) 국산 의약품원료 개발부터 생산 및 사용 허가까지 전주기 지원 확대(지원기간 1년 → 2년, 단가 3억 원 → 6억 원, +11억 원)

■ 글로벌 임상시험 허브 구축: ('26) 70억 원 → ('27 정부안) **92억 원**(+22억 원)

■ 수출 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지원: ('26) 81억 원 → ('27 정부안) **121억 원**(+40억 원)

■ 바이오헬스산업 공급망 안정 지원: ('26) 158억 원 → ('27 정부안) **169억 원**(+11억 원)

- (K-뷰티) 국내 화장품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 및 청년창업** 지원

* 피부빅데이터 규모 확대(해외 500 → 국내외 2,500명) 및 AI ready 데이터 전환(+11억 원)

** ^{신규}K-뷰티 청년창업(연 15명) 및 크리에이터 양성(연 50명), 콘텐츠 제작인프라 구축(15억 원)

■ K-뷰티 산업 혁신 기반 구축: ('26) 54억 원 → ('27 정부안) **68억 원**(+14억 원)

■ K-뷰티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 ('27 정부안) **15억 원**(신규)

- (K-의료)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규}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예약·결제, 전후 관리 등 제공) 구축(34억 원)

■ 해외환자 유치 지원: ('26) 59억 원 → ('27 정부안) **81억 원**(+22억 원)

□ (보건의료 R&D)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추진

- (신약 개발) 후보물질 발굴부터 대량생산까지 글로벌 수준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CRDMO* 육성 및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134억 원)

* CRDMO(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우리나라는 현재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역량 보유

- (재생의료) 손상 기능 회복 및 희귀난치질환 극복 등을 위한 바이오인공조직 및 차세대 유전자·세포치료 임상 연구 확대(+155억 원)

- 신약 개발 R&D 지원 : ('26) 1,003억 원 → ('27 정부안) **1,281억 원**(+278억 원)
- 재생의료 R&D 지원 : ('26) 912억 원 → ('27 정부안) **1,159억 원**(+247억 원)

	과제	2026년	2027년	주요 내용
복지안전메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 4인 가구 생계급여액 최대 13.9만원 인상 (207.8만→221.7만 원, +6.7%)
		6.51% 인상	6.7%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만 가구, 27.7월~) * 年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탈락
		기준 적용	기준 폐지	
	의료급여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개선】		■ 의료급여 입원 식대(일반식) 인상 298억 원
		-	일반식 14%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3만명, 27.7월~) * 年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탈락
		기준 적용	기준 폐지	
	기초연금	월 349,700원	349,700~380,000원	■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급여 지급
		【부부가구 수급자】		■ 저소득층(0~45%) 감액비율 10%로 축소
		20% 감액	저소득층 10% 감액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미지급	저소득층 지급	■ 저소득층(0~45%)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2급 및 3급)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27만명)	
자활사업	7.2만 명	7.5만 명	■ 참여자 수 확대(3천명) 및 급여 인상(3.7%)	
	33,940원~66,080원	35,200원~68,520원		
적극적복지	우선드림 긴급복지	37.5만건	38.8만건	■ 생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1,077천 원	1,101천 원	
		-	30만 원	■ 생계지원 우선지급 도입
	그냥드림	150개소	300개소	■ 생계곤란 국민에 기본 먹거리·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전국 운영 지원
	찾아드림 위기가구 발굴	-	포상 도입	■ 위기가구 발굴 우수 포상 (우수 읍면동 70개소, 공무원 우수사례 30개, 주민 우수사례 40개)
		-	1만 명	

	과제	2026년	2027년	주요 내용
정신건강 인프라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150명	200명	■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인력 확충 (+50명)
	신규 AI기반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	AI 기반 자살유발 모니터링 운영비 (+8억 원)	■ AI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구축·운영비(+8억 원)
	신규(가칭) 국가 자살대응실	-	1개소	■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을 위한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신규 마약 투약사범 치료·재활 공적 책임강화	-	시범사업 도입	■ 마약 투약사범(기소유예, 집행유예, 출소 예정) 전담 치료연계 및 회복지원 공적 책임강화 시범사업 도입(+22억 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1,000명	1,500명	■ 수혜 인원 확대(+500명)
	권역 치료보호기관	11개소	13개소	■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권역 치료 보호기관 확충(+2개소)
	신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 개선	-	시범사업 도입	■ 비자의 입원·치료 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17억원)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신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	지방정부 맞춤형 사업 기획·시행 (3,605억 원)	■ 지방정부가 지역 의료수요·공급을 진단 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기획·추진
	신규 지역필수의료 정책개발지원	-	필수의료협의체 필수의료지원센터	■ 중앙 - 지방정부 협력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 지역필수의료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
	고위험 산모·신생아	중증모자센터 2개소	중증모자센터 4개소 모자의료센터 특별수당 전문의 1천만원/월 전공의 5백만원/월	■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권역별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중증모자센터 확충 ■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모자 의료센터 전담의에 특별수당 지급
	공공심야약국	240개소 (인구감소지역 24개소)	265개소 (인구감소지역 35개소)	■ 공공심야약국 25개소 확대 ■ 인구감소지역(+11), 그 외 지역(+14)

	과제	2026년	2027년	주요 내용
의료인력양성·진료환경조성	신규지역의사제	-	490명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 학비 등 지원 ■지원센터를 통한 진로상담·경력개발 등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6개 시도 136명	전국(서울 외) 448명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근무수당 및 정주여건 지원 ■서울을 제외한 시행 지역 전국 확대
	시니어의사	160명	220명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에 시니어의사의 채용 연계·지원 ■시니어의사의 재진입 교육 지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100만원/월	비수도권 +20만원/월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와 소아·산부인과 전임의에 매월 수련 수당 지원 ■비수도권 지역은 20만 원 가산 지급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산과 및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 (권역응급외상센터 및 지역응급센터 일부)	산과 및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 (지역응급센터까지)	■의료사고 위험 경감을 위해 고액배상 보험료 지원 ■'27년부터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까지 지원대상 확대
지역거점병원육성	국립대병원 특화지원	-	국립대병원 9개소	■지역 국립대병원 대상 지역·기관별 상황에 맞는 특화 분야 집중 투자 ■특화분야 패키지(인프라·우수 인력·기술협력) 지원
	국립대병원 필수진료과 채용 지원	-	국립대병원 14개소	■9개 필수진료 과목 당직 전담 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경력개발 지원
	국립대병원 필수의료인력 유지 지원	-	장기재직 위한 경력개발 지원	■지역 국립대병원 필수진료과목 의료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 근무 여건 조성 ■재직기간 및 필수진료 기여도 등 평가하여 경력개발 지원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레벨업	-	포괄 2차 종합병원급 시설·장비 구축	■지역 거점인 지방의료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2차 종합병원급으로 시설·장비 구축

	과제	2026년	2027년	주요 내용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	시·군·구 최대 10억원	시·군·구 최대 16억원	■ 대상자 확대(노인 → 노인·장애인) ■ 취약지 가산 지원 * 의료취약인구감소·초고령 지역은 지원단가 1.2~1.5배 가산
	신규 취약지돌봄 센터	-	30개소	■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신설(30개소)
	신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	시범사업 도입	■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을 위한 시범사업 신규 도입(+2.5억원)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일자리 수 115.2만 개	일자리 수 118만 개	■ (공익활동형) +415개 (70.9만 → 70.9만 개) ■ (사회서비스형) +3.6만 개 (19.7만 → 21.5만 개) ■ (민간형) +0.1만개 (23.5만 → 23.6만 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장비 지원 29.7만 개	장비 지원 31.7만 개	■ 독거노인·장애인 가정 내 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2만 개)
	치매 안심재산관리 서비스	전담인력 29명	전담인력 61명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전담인력 확충(+32명)
	치매공공후견 지원	후견인 활동비용 300명	후견인 활동비용 500명	■ 치매공공후견지원 활성화를 위한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대상자 확충(+200명)
장애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14만 명	14.9만 명	■ 대상자 +9천 명 확대 ■ 시간당 단가 +690원 인상(4.0%↑) ■ 65세 도래 기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장기요양급여 간 선택권 부여
	장애인일자리	3.6만 명	3.8만 명	■ 대상자 +2.6천 명 확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2.65만 명	3.3만 명	■ 대상자 +6.5천 명 확대

	과제	2026년	2027년	주요 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개별 34개소 주간개별 125개소 주간그룹 1,500명	40개소 140개소 1,800명	■ 대상자 24시간 주간개별 +21개소, 주간그룹 +3천 명 확대 * (24시간 개별) +6개소, (주간개별) +15개소, (주간그룹) +3천명
	발달재활 서비스	11만 명	11.6만 명	■ 대상자 +6천 명 확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연 1,200시간	연 1,320시간	■ 중증 장애아동 가정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120시간), ■ 부모·가족 휴식지원 +0. 2만명 ■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 신설(시간당 영아 2천 원, 유아 1천 원)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준수	98.2%	100%	■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 가이드라인 적용시설 2개 유형 확대 * 확대피해 장애인, 장애아동 쉼터
미래세대 성장지원	학대피해아동 특화쉼터	-	18개소	■ 영유아·장애아동 특화쉼터 확충(18개소)
	신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	45.1만 명	■ 만 18세('09년생) 첫 보험료 지원
	청년 공공일자리	1.1만 개	2만 개	■ (일자리확대) +8.9천 개 * < 복지·돌봄 분야 > +8.8천 개 < 바이오·의료분야 > +1백 개
인구구조변화 대응	신규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부모급여> 0세 100만원/월 1세 50만원/월	첫째 1천만원 둘째 1.2천만원 셋째~ 1.5천만원	■ 출생아동에게 출생 후 1년간 분기별 4회에 나누어 아이맞이지원금 지급 - 우대지역은 500만원 추가 지급
	신규 아동기본수당	<아동수당> 월 10~13만원	월 20~30만원	■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급 - 우대지역은 10만원 추가 지급 - 가정 보육 0~1세는 30만 원 추가 지급
	가임력 검사비 지원	36만 명	40만 명	■ (대상확대) +4만 명

	과제	2026년	2027년	주요 내용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13개소 48명	15개소 63명	■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2개소) ■ 전문 상담인력 확충(+15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	42억 원	67억 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예산 확충(+25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기저귀 9.6만 명 조제분유 1.4천 명	13만 명 1.7천 명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에 기저귀(+3.4만 명), 조제분유(+0.3천 명) 바우처 지원
	신규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운영시간 학기 중 13~20시	방학 중 9~18시	■ 틈새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9~18시) ■ 아침 간식 및 점심·저녁 제공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공용윤리위 15개소	공용윤리위 17개소, 온라인 통한 사전의향서	■ 중소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확충 ■ 온라인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호스피스 서비스	전문기관 193개소	전문기관 230개소	■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확대하여,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신규 간병서비스 품질관리	-	표준교육과정 등 품질관리, 간병매칭 공적 플랫폼	■ 간병인 대상 표준교육과정 도입 ■ 간병서비스 매칭 공적 플랫폼 구축
보건·복지 AX 혁신	돌봄로봇 확산	-	돌봄로봇 실증	■ 복지관 등 지역사회 돌봄현장(12거점)에 돌봄로봇 배치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10개), 장애인거주시설(5개)에 목적별 돌봄로봇 배치 ■ 돌봄로봇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 분석
	데이터 기반 구축	-	플랫폼 구축	■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 데이터 통합·유통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신규 공공의료AI 고속도로	-	책임의료기관 30개소	■ 공공의료AI 플랫폼에 공공병원을 연결하여 AI를 활용한 진료보조, 환자관리 등 지원
	신규 보건의료AI 데이터 허브	-	병원·공공기관 10개소	■ 클라우드 기반 의료데이터 저장소를 마련하여 기관 간 연계·공동활용 ■ 병원·공공기관 등 10개소 참여
	신규 취약지 일차의료AX 바우처 지원	-	취약지 일차의료기관 200~400개소	■ 의료취약지 소재 필수진료과목 의원에 AI솔루션 패키지(진료보조·영상판독 등) 제공

	과제	2026년	2027년	주요 내용
K 바 이 오 경 쟁 력 강 화	신규 청년 유니콘기업	-	13개 기업	■ 10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육성 지원 ■ 기업당 3~7억 원, 단계별 지원
	신규 글로벌 탐티어 CRO	-	2개 기업	■ 국내 CRO를 지원하여 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지원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5개 기업	10개 기업	■ 의약품 제조기업의 글로벌 GMP인증 지원으로 제조 및 수출 역량 강화
	화장품산업 피부빅데이터 제공	해외 500명/연 피부데이터	국내외 2,500명/연 피부데이터	■ 화장품 수출 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피부데이터 지원
	신규 K-뷰티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	크리에이터 50명 양성 창업 15명 지원	■ K-뷰티아카데미를 활용하여 글로벌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과 창업 지원
	K-뷰티 글로벌 진출	뷰티홍보관 (인도네시아·UAE) 플래그십허브 (미국·프랑스)	뷰티홍보관 (+베트남·미국) 플래그십허브 (+중국)	■ K-브랜드 해외홍보관(KOREA360) 내 뷰티관 운영국을 4개국으로 확대 ■ 플래그십허브(체험판매장) 운영국 3개국으로 확대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선

[목 차]

1. 생계와 의료는 더 든든하게, 갑작스러운 위기는 더 빠르게, 자립의 기회는 더 넓게 지원합니다.	1
2. 저소득층 어르신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강화합니다.	2
3.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포착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3
4.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도입, 지원금액 대폭 확대합니다.	4
5. 빈틈없는 아동 보호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5
6.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6
7. 장애인의 일상 속 돌봄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7
8.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지에는 공공형 돌봄센터를 신설합니다.	9
9. 노인 일자리를 118만 개로 확대합니다.	10
10.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11
11.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12
12. 지역을 우대하고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도입합니다.	13
13. 국립대병원을 '5급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합니다.	15
14. 지역·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합니다.	16
15.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AI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17
16. 자살 예방 및 중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18
17.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9
18.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와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합니다.	20
19-1. K-뷰티·K-의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1
19-2. 제약·바이오, 사회문제해결 R&D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앞당깁니다. ...	22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를 달성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합니다.	23

1. 생계와 의료는 더 든든하게, 갑작스러운 위기는 더 빠르게, 자립의 기회는 더 넓게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박민정 과장, 자활정책과 김수환 과장, 기초의료보장과 강준 과장, 044-202-3051,3070,3090)

생계급여 지원액 역대 최대 인상 (4인 가구 +6.70%)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여 수급권자 확대 (+3만명)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 지급(30만원) 신설

자활사업 확대(참여자 + 3천명, 자활급여 + 3.70%)

□ 주요 내용

- (생계급여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 '27년 생계급여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5.5(1인 가구)~13.9만 원(4인 가구) 인상*

* (1인가구)월 5.5만원 인상(82.1만원 → 87.6만원) / (4인가구)월 13.9만원 인상(207.8만원 → 221.7만원)

- (의료급여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3만명 확대),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 입원식대 일반식 단가 인상

-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 지급) 급박한 위기* 해소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생계지원금(30만원) 우선 지급 신설

* 분유·기저귀 등이 시급하나 구매 어려움, 교통비·통신비가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 등

- (자활사업 확대)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 등 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 지원을 위해 참여자 규모를 3천명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

* (참여자 수) 7.2만명 → 7.5만명 ** (유형별 급여(일)) 33,940원~66,080원 → 35,200원~68,520원

사업 개요

- (생계급여·의료급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생계급여 지급, 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 외 의료비 전액 지원

- (긴급복지) 가출·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생계·의료비 등 선 지원하고 후 조사 실시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 192만, 4인 487만 이하), (재산) 대도시 2.4억원 이하

- (자활사업)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그 외 수급자 및 차상위자(희망참여)등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근로*하며 급여 수령, 직업훈련 등 자립 준비

* (근무 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소득 최대 178만원('27년 시장진입형 기준)

2. 저소득층 어르신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합니다.

(기초연금과, 박나연 과장, 044-202-3680)

“더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

- ☐ (선정기준) 노인 70%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유지
- ☐ (하후 차등지급) **현행** 정액급여 → **개편** 소득수준(3개) 따라 추가지원
 - ‘노인 규모 30%와 45%’ 기준으로 세 구간을 나누어 차등 지급
 - *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

< 하후 차등지급 구조 >

(노인 하위)	현행		제도 변경 시
	'26년		'27년
45~70% (290만명)	35만원		35만원
30~45% (174만명)			35.9만원 (물가연동)
0~30% (348만명)			38만원 (+3만원)

- ☐ (부부감액)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
→ **개편** 저소득층(0~45%) 감액비율 10%로 축소, 총 234만명
 - *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26) → 68.4만원('27), +12.4만원 혜택
- ☐ (직역연금) **현행**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소득·재산이 낮아도
원천적 배제 → **개편** 저소득층(0~45%) 기초연금 지급, 총 11만명
 - *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 혜택

사업 개요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지급액) 소득 하위 30% 38만원, 30~45% 35.9만원, 45~70% 35만원
- (신청방법) **오프라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

* (전화 상담·문의) 129(보건복지부), 1335(국민연금공단)

3.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포착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지역복지과, 서일환 과장, 044-202-3120)
(사회서비스자원과, 권혜나 과장, 044-202-3250)

위기가구 접근 장벽 낮추는 고립예방, 희망드림꾸러미, 그냥드림
위기가구 적극 발굴한 읍면동, 지자체 공무원, 주민에게 포상금

□ 주요 내용

- (고립 예방)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신속하게 찾아 보호하는 ^{가칭}고립통합대응시스템으로 확대·개편
 - 찾아낸 고립 위험군에게는 필요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 (공통) 안부확인, (청년) 마음회복, 일상회복, (중장년) 관계개선, 건강관리, 경제자립, (노인) 돌봄연계, 사회참여, 안전확인
 - ※ (고립통합대응시스템) 금융연체, 우울증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 지원
- (희망드림 꾸러미) 읍면동 위기가구 최초 방문상담 시 원활한 상담을 위해 식료품 등 생활물품 세트 제공(신규 7.5억 원)
 - * 10만 위기가구(읍면동 1,000개소, 읍면동별 100가구), 첫 방문 시 25천원 상당 물품 지원
- (그냥드림)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시군구 그냥드림 운영
 - * ('26년) 본예산 100개소*4개월+150개소*8개월, 추경예산 150개소*4개월 → ('27년) 300개소*12개월
- (위기가구 발굴 활동 포상) 위기가구 발굴·지원 활동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활동 읍면동, 지방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 포상금 지급
 - * (읍면동) 600백만원, (지방 공무원) 200백만원, (지역주민) 40백만원

4.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도입, 지원금액 대폭 확대합니다.

(아동정책과 박찬수 과장, 044-202-3410)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아동기본수당(매월 20만 원) 지급

— 우대지역은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5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셋째 2,000만 원)·아동기본수당(매월 30만 원) 지원

□ 주요 내용

※ 「아동수당법」 개정 필요

- (주요내용)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여 급여를 단순화하고 지원 강화

* '27년 6월 이전 출생아는 기존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적용되며, '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적용

- (아이맞이지원금)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출생 후 1년간 분기별 4회 분할 지급

· 우대지역*은 첫째 1,5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셋째 이상 2,000만 원 지급

* 행안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하여 정할 예정

- (아동기본수당)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현금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우대지역은 매월 30만 원(현금 15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 지급

· (가정 보육 가산금) 가정 보육하는 0~1세의 경우 매월 30만 원 추가 지급

< 현행과 개편안 비교(첫째아 기준, 가정보육 시) >

(단위: 만 원)

		0세	1세	2~12세	0~12세		0세	1세	2~12세	0~12세
10/월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0세: 100/월 1세: 50/월		부모급여		부모급여		→	가정보육 가산금			
200/1회		첫만남					아이맞이 지원금			
기본	월	110 (첫달 +200)	60	10	-		50 (분기별+250)	50	20	
	연	1,520	720	120	3,560		1,600	600	240	4,840
우대 지역	월	112 (첫달 +200)	62	12			60 (분기별+375)	60	30	
	연	1,544	744	144	3,872		2,220	720	360	6,900

* 현행 우대지역은 인구감소지역(특별) 기준

5. 빈틈없는 아동 보호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아동학대대응과, 양진혁 과장, 044-202-3380)

(아동보호자립과, 구미정 과장, 044-202-2875)

영유아·장애아동 특화쉼터 확충(18개소),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시행(+150백만원, 신규)

방학기간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점심·저녁 식사제공 등 올해 첫선 보인 초등 틈새돌봄 사업, 내년 본격 운영('26년 5주 → '27년 12주)

□ 주요 내용

<아동학대 대응>

- (학대피해아동특화쉼터 운영) 지정된 시설 일부에 영유아·장애아동 보호, 양육에 적합한 공간 리모델링 및 관련 기자재 구입비 지원(36백만원, 신규)*
* 바닥 및 벽면에 안전매트 등 충격방지 설비 및 유아용 기자재 구입 지원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및 특별위원회 운영 예산(150백만원, 신규)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 여름·겨울방학 전(全) 기간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찾는 아동 누구나 빈틈없는 돌봄과 든든한 점심·저녁 식사 제공
* '26년 일반예비비 11,821백만원 → '27년 예산안 27,943백만원
-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운영기간 확대('26년 5주 → '27년 12주) 및 틈새돌봄 사업수행 센터 운영비 증액 ('26년 86만원/개소 → '27년 211만원/개소)

6.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장애인자립기반과, 박문수 과장, 044-202-3280)

장애인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 27만 명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 개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2급 및 3급) 전체로 확대('27.7월 이후)
 - * 대상자: 26.7만명, 예산: 1,999억 원('27.7)
- (선정기준액) '26년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
 -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제4조제2항)
- (급여액 범위) 기초급여는 최대 18만원 지급, 부가급여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2.3~6.8만 원 지급
 - * (기초급여) 근로 능력 상실·저하로 인한 소득감소 비용 보전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3급 단일 장애인 현금급여표>

구분	18 ~ 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79,395원	67,500원	246,895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67,500원	67,500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179,395원	60,000원	239,395원		60,000원	60,000원
차상위초과	179,395원	22,500원	201,895원		37,500원	37,500원

*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생계급여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상당액인 179,395원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27년 단가 변경 예정

7. 장애인의 일상 속 돌봄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장애인서비스과, 이고운 과장, 044-202-3340)

(장애인건강과, 김성철 과장, 044-202-3190)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9천명 추가 확대(139,715명 → 148,715명)

장애아동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까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주요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

-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9천 명 추가 확대(139,715명 → 148,715명)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단가 4% 인상(17,270원→17,960원, +690원)
- 65세 도래 기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장기요양급여 간 선택권 부여*('27.7~)

* (現) 65세 도래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서비스 전환(활동지원→장기요양)에 따른 감소분을 활동지원으로 보전 → (改) 65세 도래 기존 수급자는 활동지원 계속 수급가능(단, 장기요양급여는 중복수급 불가)

< 발달장애인 지원 >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도전행동(자·타해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최대 24시간 맞춤형 1:1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 (24시간 개별) 34→40개소(+6), (주간개별) 125→140개소(+15), (주간그룹) 1,500→1,800명(+300)

- 보호자의 입원,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시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 확대(대구, 경북 2개소→5개소, +3개소)

- (주간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자립지원 및 보호자 돌봄부담 해소를 위해 활동서비스 확대*

* (주간활동) 15,000명→20,000명(+5,000명), (방과후활동) 11,500명→13,000명(+1,500명)

- (부모·가족 휴식지원)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해 서비스 지원 확대(1.6만명 → 1.8만명, +0.2만명)

< 장애아동 지원 >

-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연간 돌봄 시간 확대(연1,200시간 → 1,320시간, +120시간)
 -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에 대한 수당 신설(시간당 영아 2천원, 유아 1천원)
- (발달재활서비스) 발달 지연 아동 증가, 대기수요 등을 반영하여 발달 재활서비스 대상 인원 6천명 추가 확대(11만명 → 11.6만명)

사업 개요

구분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장애유형	연령	소득기준	
활동지원	소 장애	만 6~65세 미만	-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 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활동지원등급별 상이)
주간활동	지적, 자폐성	만 18세 이상	-	참여형·창의형 등 지역사회 내 그룹형 프로그램 지원(기초형 월 13시간, 확장형 월 17시간)
방과후활동	지적, 자폐성	만 6~18세 미만	-	취미·여가, 직업탐구 등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월 66시간)
최중증 긴급돌봄	지적, 자폐성	만 6~65세 미만	-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시 일시적 돌봄지원(1회 5일 이내, 연 최대 30일)
최중증 통합돌봄	지적, 자폐성	만 18~65세 미만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주간 개별 1:1, 주간 그룹 1:1
부모·가족 휴식지원	지적, 자폐성	전 연령	-	장애인 가족 휴식(연1회 최대 400만원), 부모상담(월 16만원) 및 교육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 정도가 심한 소 장애	만 18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연1,200시간) 및 휴식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만 18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언어·청능, 미술·음악·놀이심리재활, 행동·감각·운동발달 등(최대 월 26만원)

8.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지에는 공공형 돌봄센터를 신설합니다.

(통합돌봄정책과, 정혜은 과장, 044-202-3580)

(통합돌봄사업과, 변성미 과장, 044-202-3590)

돌봄 수요 많을수록, 지역 여건 열악할수록 두터운 서비스 지원 (620억원 → 1,282억원 107%↑)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에 생활권 단위 돌봄 인프라 확충 (신규 30개소, 61억원)

□ 주요 내용

-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자 확대(노인→장애인), 지역별 돌봄수요 반영·격차 완화 위해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은 지원단가 1.5배까지 가산하는 등 지원 확대
 - * ('26년) 의료취약·초고령지역 등 고려하여 3개 그룹으로 구분, 그룹별 年 4/8/10억원 정액 지원 → ('27년) 지역 통합돌봄 수요자 규모 반영, 의료취약·인구감소·초고령지역은 지원단가 1.2~1.5배 가산 지원
- (취약지 돌봄센터) 인구감소지역에 주야간·단기보호, 방문형 재가서비스, 맞춤형돌봄·긴급돌봄 등 지역돌봄을 제공하는 공립 돌봄센터 설치(30개소)

사업 개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

- (개요) 돌봄이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
- (지역특화서비스) 기존 돌봄서비스의 빈틈을 보충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필요도를 고려해 서비스 개발·확충 및 제공

□ 취약지 돌봄센터

- (기능)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 돌봄 거점 → 돌봄 공백 보완, 정주여건 개선
- (방식) 기존 공공 유휴시설 적극 활용하는 리모델링 방식 설치, 공립(지자체 소유)-위탁(사회서비스원·비영리법인 등 위탁) 구조
- (유형) 서비스 수요 밀도와 인력 확보 여건이 지역별로 상이 → 거점형·연계형·기능확장형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모형 다변화

구분	거점형 (10개소)	연계형 (10개소)	기능확장형 (10개소)
지역	공급기반 전반 취약	일부 방문형 인프라	공공인프라 존재
특징	주야간·단기 + 방문형·지역돌봄 풀패키지 제공	주야간·단기·지역돌봄만 수행 방문형은 민간기관 연계	종합재가센터, 공립형 요양시설에 돌봄기능 추가

9. 노인 일자리를 118만 개로 확대합니다.

(노인지원과, 신명희 과장, 044-202-3470)

노인일자리 수 118만 개로 확대 (115.2만 → 118.0만 개, +2.8만 개)

□ 주요 내용

- (노인일자리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후기고령층 빈곤 완화를 위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2.8만개 확대

* (노인역량활용) ('26) 19.7만명 → ('27) 21.5만명(26대비 +18,000명)

(현장실습훈련) ('26) 7만명 → ('27) 8만명(26대비 +10,000명)

- (안전한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728명 추가 배치를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

* 안전전담인력 역할 : 노인일자리 사업단 사고예방 활동 및 활동처 유해요인 사전조사, 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

사업 개요

-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일부 유형 60세 이상)
- (지원내용)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

유 형		내 용	대 상	사업량 (천개)	월평균 시간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계		-	-	1,180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노년케어보육시설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가정연금 수급자 등	709	30 (3시간 10일)	월 20만 원 (11개월)
역량활용형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노년세대 특화형 돌봄 안전 환경 분야 등)	65세 이상 (일부 60세)	215	60 (3시간 20일)	월 78.1만 원 (10개월)
민 간 형	창업형	공동체 사업단	60세 이상	65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2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 기업에 지원	
	취업형	취업 지원형		99	일선 수행기관에 15만원/자체, 5만원/민간 사업비 지원	
		현장실습 훈련		80	기업에 최대 270만원 지원 (월 10만원/3개월, 월 30만원/3개월)	
		선도모델		10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10.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청년정책팀, 이화영 팀장, 044-202-3701)

고립·은둔, 가족돌봄 등 회복 필요 청년 지원 규모 확대(+6천명)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 기관 확충(+120개소)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확대)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관계·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6천명)
 * ('26년 예산) 9,288백만원 → ('27년 정부안) 39,664백만원
-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민간기관 120개소를 지원*해 사례관리,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26.下)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소 → ('27.下)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소+ 시군구 기관 120개소
- (다차원적 회복 지원)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일상·관계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와 연습까지 실질적 회복을 지원

< 회복·성장 지원 내용 예시 >

기초적 회복	사회참여 준비	회복형 사회참여
• 일상회복 - 수면, 식사 등 생활리듬 회복, 외출·사회활동 시작 • 관계회복 - 가족·친구 관계 회복, 또래 모임 참여(공동식사 등)	• 사회참여 역량 강화 - 디지털 활용, 의사소통능력, 금융·경제교육 등 • 동료활동가 양성 교육 참여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을 위한 교육 참여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역할 - 은둔 경험을 극복한 청년이 당사자성을 활용해 은둔청년을 돕는 멘토 역할 수행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생활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며 회복과 사회참여 병행

11.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정책과, 전명숙 과장, 044-202-3610)

18세 도래 '09년생부터 생애 첫 연금보험료 1개월 지원

□ 주요 내용

- (도입 배경) 청년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 모든 청년('27년 18세('09년생)부터)에게 최초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
→ 향후 가입기간 확대, 연금 수급액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첫 보험료 지원' 추진 (정부 123대 국정과제로 선정)

* 첫 보험료 지원 이후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가능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수급하는 연금액 증가

- (지원 내용) '27년에 18세 도래하는 '09년생을 대상으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 지원

* '27년 지원금 42천원(예상): 42만원('27.7월 하한액 전망치) × 10%('27년 보험료율)

사업 개요

-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만 18세 도달 청년
 - * 제도 시행하는 '27년에 18세 도래하는 '09년생부터 지원하되 18~26세 기간 중 신청가능
- (지원내용)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 지원

12. 지역을 우대하고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도입합니다.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이영재 과장, 044-202-1920)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원 신규 편성**

□ 도입 배경

-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집중 투자할 필요성 그간 지속 제기됨
 -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26.3월)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지역별 의료 공급·수요 여건, 취약 양상 등이 상이한바 필수의료 공백 해소 위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설계·집행토록 지원 필요

□ 주요 사업('27년 정부안 기준 1.26조원)

- * (투자 방향) ¹⁾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 ²⁾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 ³⁾지방 정부의 자율성 강화 지원
- (지역 자율성 강화)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을 배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의료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기획·추진
 - 중앙정부는 매년 지자체별 사업 성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 확산 및 성과 부진 시도에 대한 컨설팅 실시
- (공공의료기관 육성)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권역별 거점 공공병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인프라 등 확충 지원
-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사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필수 의료 인력 배출, 전공의 수련체계 강화 및 수련 수당 지급 등 지원

참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정부안 세부내용

□ 총 21개 사업 1조 2,614억원

(단위 : 억 원)

구 분	'26예산 (A)	정부안 (B)	전년비 (C=B-A)	증감율 (C/A)*100	사업 주요 내용
계	8,071	1조 2,614	4,543	56.3	
① 신규사업 합계(3개)	0	3,689	3,689	순증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0	3,605	3,605	순증	지자체 보조, 지역 자율 사업 소아야간진료, 분만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 등 포함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0	44	44	순증	지역의사 학비 등 양성 지원
지·필·공 AI 기본의료 역량 확보	0	40	40	순증	의료취약지 알차의료기관 'AI파트' 바우처 지원
② 이관사업 합계(18개)	8,071	8,925	854	10.6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150	231	81	54.0	시니어의사, 계약형 필수 의사 등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82	93	10	12.2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1,690	1,512	△178	△10.5	전공의 수련체계 구축, 수련수당 등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10	22	12	120.0	중환자 정보시스템 및 모니터링 등
ICT 활용 필수의료 협력네트워크 구축	52	57	5	9.6	e-ICU 운영비, 원격협진 지원시스템 등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	1,154	2,551	1,397	121.1	지역국립대병원 특화지원, 시설장비 지원, 진료 협력체계, 필수진료과 신규 채용, 공공임상 교수제,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등
국립대병원 지원(서울대병원 제외)	701	488	△214	△30.4	시설확충 및 보수, 장비구입 및 교체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280	2,350	70	3.1	지방의료원 신축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826	738	△88	△10.7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49	44	△5	△10.2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장비비 지원 등
지역암센터 역량 강화	50	53	3	6.0	지역암센터 기능보강 및 지역특화암관리
소아청소년 암 진료체계 구축	101	110	9	8.9	소아암 거점병원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등
재활병원 지원	140	39	△100	△72.1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원 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54	307	153	99.4	전문인력 특별수당 신설, 모자센터 설치·운영비, 이송체계 구축 등
중증응급 삼차원진료 대응체계 지원	164	144	△20	△12.2	권역(15개) 및 지역(14개) 센터 운영비 등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57	64	7	12.3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등
지역필수의료 정책개발지원	3	22	19	633.3	필수의료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 등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지원	66	101	36	53.0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원 등
* 신규사업으로 이관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343	0	△343	이관	소아 야간·휴일 진료(달빛병원) 지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 억 원 단위 표기 반올림 등으로 일부 단순 합계 차이 가능

13.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합니다.

(국립대병원정책과, 김도균 과장, 044-202-2510)

필수의료 인력 확보부터 지역별 특화발전, AI 전환, 지역의료 협력까지 집중 투자하여 지역에서도 중증·필수의료를 완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주요 내용

- (필수의료 인력) 지역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부터 장기재직까지 지원 (신규 등 202억)
 - 필수진료과 ▲전문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경력개발 바우처 지원 및 ▲장기재직 교수 보상 강화를 통해 우수 의료인력 확보 지원(신규 162억)
 - * 연간 126명 신규채용·경력개발 바우처 지원(신규 83억) / 5년 이상 장기재직 보상 강화(신규 79억)
 -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 보완(40억, 계속)
- (5극3특 특화발전) 지역별 의료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고려하여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 (신규 1,188억)
 - ▲특화분야 인프라 확충, ▲우수 의료진(명의) 채용, ▲국내외 선도기관과 의료기술 협력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특화분야 빅5 수준 육성
- (의료 AI 전환)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를 연결하고 AI 활용기반을 확충하여 국립대병원을 의료 AI·R&D 혁신거점으로 육성 (신규 등 204억)
 - ▲초 국립대병원의 통합 임상데이터셋(CDW) 구축(신규 ISP 3.6억) 및 ▲의료 AI 안정적 활용을 위해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신규 71억)
 - * 공공병원이 고가의 AI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형 통합활용 시스템 구축
 - ▲기존 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도 지속하여 환자안전·진료정밀도 향상 및 의료진 업무 효율화 지원 (129억, 계속)
- (지역의료 협력체계) 지역 필수의료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 (224억, 확대)
 - * 권역책임의료기관 진료협력 및 공공의료 전담조직·인력 확대(+26억 증액)
- (인프라 지원)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등 시설·장비(계속 487억, 교육부 이체)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계속 732억) 등 기존 인프라 사업 지속 지원

14. 지역 · 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합니다.

(지역의료인력양성과, 민차영 과장, 044-202-1960)

(의료인력정책과, 정연희 과장, 044-202-2250)

지역의사제 도입·지역의사지원센터 신설(중앙 1개소, 권역 8개소)

시니어의사 지원인원 확대(전일제 90→170명)·교육훈련체계 신규 구축(+6억)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확대(11개→서울 제외 전국)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용 지역·공공병원 등 지원 (726억원)

비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수련수당 지원 강화 (+77억원)

□ 주요 내용

-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사선발전형 490명(27학번) 대상 등록금 실비 및 교재비·주거비(기숙사비 포함) 등 지원 (신규31억원)
- (지역의사지원센터) 중앙 1개소·권역 8개소 설립·운영 지원 (신규13억원)
 - * (중앙 지역의사지원센터) 7.2억원, (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 개소당 1.4억원(국비보조율 50%)
-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장기 계약한 필수과목 전문의에게 지역근무수당 지원 참여지역 확대 ('26) 28억원 → ('27안) 99억원(+71억원)
 - * ('26) 6개 시도, 136명 → ('26 추경) 11개 시도, 268명 → ('27) 15개 시도(서울 제외 전국), 448명
- (시니어의사 지원 확대) 지역 공공·책임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확대 ('26) 72억원 → ('27안) 124억원(+52억원)
- (재진입 교육훈련체계 구축)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료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시니어의사 대상 맞춤형 재진입 교육·훈련체계 신규 구축
 - * ('26) 채용지원 70억, 운영지원 2억 → ('27) 채용지원 116억, 교육훈련 6억, 운영지원 2억
- (필수과목 수련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용 지역·공공병원 등 지원 (726억원), 비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수련수당 지원 강화 (+77억원)

15.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AI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박정환 과장, 044-202-2380)

전국민 AI 기본의료 추진을 위해 2,467억원 편성

□ 주요 내용

- ❶ (일차의료 AX) 우리 동네에서도 첨단 AI를 활용한 진료서비스 제공(132억)
 - (취약지 일차의료 AX) 전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취약지 소재 의원 대상 진료 보조, 행정, 건강관리 등 ‘일차의료 AI 패키지’ 지원
- ❷ (응급의료 AX)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AI 분석을 지원하는 ‘(가칭)응급 통합 AI 플랫폼’ 실증·확산* 추진(83억)
 - * 소방청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및 중앙 응급의료 정보망과의 연계
- ❸ (환자 중심 AX) 「나의 건강기록*」(PHR) 기반 AI가 어려운 의학 용어를 해석해 환자가 건강 상태 확인하고 건강관리를 지원(387억)
 - * 나의 건강기록(PHR): 여러 병원에 흩어진 나의 진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 「나의 건강기록」(PHR)에 CT, MRI 영상정보를 연동하여 다른 병원 방문 시 QR 인증을 통해 의료영상 및 진료정보 공유 추진
- ❹ (소버린 AI) 공공기관·의료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데이터를 통합한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구축 및 한국형 의료 AI 개발 추진(349억)
 - *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❶ 건보공단, 암센터 등 공공보건의료데이터 + ❷ 국립대병원 내 임상 데이터 + 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내 연구데이터 등 비식별 가명 데이터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달라지는 미래

-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가 아플 때 충분한 서비스 받기 어려움
 - ☞ **임상 판단 보조+행정 효율화**를 통해 **진료 공백 완화**
-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증상에 맞는 병원 이송에 어려움
 - ☞ **AI 활용 실시간 연계로 이송 지연 최소화, 골든타임 내 정확한 조치**
- 의료기관별 파편화된 데이터로 내 진료기록을 직접 이송
 - ☞ **국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한국형 의료 AI로 기관 간 진료 정보 공유**

16. 자살 예방 및 중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자살예방정책과, 박재우 과장, 044-202-3890)

(정신건강관리과, 송명준 과장, 044-202-3870)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150→200명, 자살예방센터 967→1,509명,
AI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마약중독 치료 지원 확대 등 추진**

□ 주요 내용

- (인력 확충)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150명→200명), 전국 255개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967명→1,509명)
-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AI 기반으로 온라인상 동반자살 모집·수단판매 등 불법 정보를 탐지·삭제요청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 *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플랫폼 24시간 모니터링 → 유발정보 탐지 → 사업자 삭제 요청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발생상황을 확인하고 즉각 대응·관리·지원하는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추진
 - * 복지부·경찰청·소방청 합동근무 통해 자살시도·사망에 대한 출동·조치·보호 등 상황관리
- (마약중독 치료) 치료비 지원 확대(’26 1,000명→’27 1,500명), 권역 치료보호기관 추가 확충(’26 11개소 → ’27 +2개소), 범정부 대응 마약 투약사범(기소유예, 집행유예, 출소예정) 전담 치료연계 및 회복지원의 공적 책임강화 시범사업 도입(+22억원)
 - * ▲ 「치료보호기관」에 전담인력 배치 → 기소유예·집행유예·교정시설 출소자 치료의뢰 및 전문치료
 - ▲ 치료 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전담인력 배치 → 집중 사례관리(단약, 상담 등)로 회복 지원

자살예방센터 개요

- (개소 수) 전국 255개소 설치·운영 중
 - * 독립형 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형 49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산하팀 200개소
- (주요 역할) 지역 내 자살예방 관련 상담·교육·홍보 등 업무 수행
- (’27년 주요 개편) ^센터당 지원 인력 5→7명 확대

17.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정책과, 모두순 과장, 044-202-3380)

(간호정책과, 조하진 과장, 044-202-1760)

공용윤리위원회 지원 확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강화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 지원 확대(193→230개소) 등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역량있는 간병인력 양성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추진

□ 주요 내용

- (연명의료결정 지원) 중소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지원을 확대(15개소→17개소)하는 등 제도 기반 강화(+40억)

*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의료기관의 제도 참여를 지원('26.7월 15개 공용윤리위원회가 253개 의료기관 지원)

- (호스피스 확대)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통증 완화 및 신체적, 심리적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추가 지정*(+37개소) 사업비 증액(+10억)

* ('26년) 193개소 → ('27년) 230개소

- (간병인력 양성 및 질 관리) 간병인 표준교육과정 운영, 간병인력 매칭을 위한 공적 플랫폼 구축, 간병서비스 실태 점검 등 간병인력 양성 및 질 관리 추진(+14억)

* (국정과제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간병 부담 완화 : 간병 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 질 제고

사업 개요

-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
- (호스피스) 호스피스 대상환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신체적 돌봄, 심리적 돌봄, 사회적돌봄,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
 -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
- (간병인력 양성 및 질 관리) 고령화 등으로 예상되는 간병수요 급증에 대응, 역량있는 간병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적 관리체계 구축

18.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와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합니다.

(출산정책과, 최영준 과장, 044-202-3390)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사 지원규모 확대(+4만 명)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지원 확대(권역센터 +2개소)

□ 임신 前 건강관리 확대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강화

- 20~49세 모든 남녀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 수혜인원 확대(36만→40만 명, +4만 명)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26) 155억 원 → ('27 정부안) 181억 원(+26억 원)

- 상담수요가 높거나 미설치된 지역의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추가 확충하여 심리·정서지원 확대(신규센터 +2개소)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26) 22억 원 → ('27 정부안) 30억 원(+8억 원)
('26)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3개소 → ('27)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5개소

- 난임·임산부의 심리상담센터 전문 상담인력을 추가 확충하여 상담대기를 해소하고 상담프로그램 강화(상담인력 증원 +15명)

* ('27) 중앙센터 11명(+2명), 권역센터 52명(+13명)

사업 개요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주요 생애주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

* 제1주기 : 29세 이하, 제2주기: 30~34세, 제3주기 : 35~39세

- (지원내용) 여성(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와 가족 대상 대면·비대면 상담, 자조모임 등 심리·정서 지원

* 중앙센터 1개소(국립중앙의료원), 권역센터 13개소(서울, 서울서남, 인천, 대구, 경기 남부, 경기북부, 경북, 경북서부, 전남, 전북, 경남, 부산, 제주)

19-1. K-뷰티·K-의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보건산업정책과, 김건훈 과장, 044-202-2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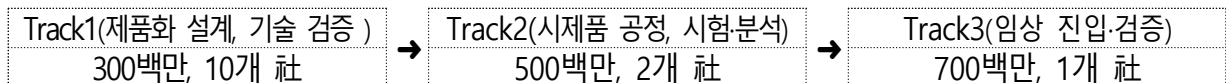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김유라 과장, 044-202-2940)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주철 과장, 044-202-2980)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지원('27년 13개社, 신규 50억원)
K-뷰티 혁신 기반 구축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45억원)
K-헬스케어 통합 허브 플랫폼 구축(+34억원)

□ 주요 내용

-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지원) 청년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시장진출 등을 단계별 집중 지원하여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단계별 기술 검증, 시험·분석 및 임상 진입·검증 등을 바우처 지원



- (K-뷰티 혁신 기반 구축)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정책* 추진 및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지원

*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26.下) 및 시행('27.下 예상)에 따른 법정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정책지원

- 피부빅데이터 종류·규모 확대(해외 500명→국내외 2,500명) 및 AI ready 데이터 전환, K-뷰티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연 50명), 창업(연 15명) 및 콘텐츠 제작·송출지원 등
- (K-뷰티 글로벌 진출) 중소화장품의 해외 홍보·체험 강화
 - K-브랜드 해외홍보관 內 뷰티관 운영국 확대(인도네시아, UAE→베트남, 미국 추가), 플래그십허브* 설치 확대('26년 미국·프랑스 → '27년 중국 추가)
-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 및 의료관광 통합허브 구축 추진* ('27년 34억원 신규)

*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개정('26.5.26.공포, '27.5.27.시행)

- 예약, 사전/사후관리, 결제 등 전주기 관리를 위한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 ('26년) 정보화설계(ISP) → ('27년) 플랫폼 구축 → ('28년) 플랫폼 구축 완료 및 국내외 홍보 강화

19-2. 제약·바이오, 사회문제해결 R&D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앞당깁니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백영하 과장, 044-202-2920)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조 원 R&D 편성

□ 주요 신규·확대 사업

- (혁신신약) 글로벌 수준의 신약 개발 역량, 플랫폼 기술 보유 기업 육성
 -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공정 개발, 상업용 대량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CRDMO* 육성 지원^(78억 원, 신규)
- * CRDMO: 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우리나라는 현재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 보유
- 하나의 기술로 여러 신약을 개발하고, 기술 수출이 가능한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56억 원, 신규)
- (재생의료) 손상된 기능 회복,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투자 확대
 - 원천기술의 임상 연계 촉진 등을 위한 재생의료 전주기 지원^(302억 원 증액)
 - 바이오 인공조직^(63억 원 신규) 및 차세대 유전자세포치료 임상 연구 확대^(260억 원 증액)
 - 지역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세포처리시설 공용활용, 공정 고도화 지원^(64억 원 신규)
 - 항노화·역노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유도 치료제 개발 등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95억 원, 증액)
- (사회문제 해결) 환자 최적화 치료방법 규명^(61억 원, 신규), 아동·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해결^(17억 원, 신규), 지역 문제 해결^(60억 원, 증액) 등을 위한 R&D 신설·확대

예산편성 분야별 주요내용

- (바이오헬스 혁신기술) 신약·의료기기, 재생의료기술 개발 등 3,181억 원
- (AI기본의료) 데이터 기반 AI 의료 실현 위한 R&D 투자 1,276억 원
- (지역·필수의료) 지역의료 역량 강화, 질환 극복 등 4,230억 원
- (도전적·임무중심 연구) 도전적 연구, 사회문제 해결 등 1,761억 원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100%를 달성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합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반윤주 과장, 044-202-3270)

12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대비 7.0% 증액

* ('26년) 9,847억원 → ('27년) 1조 540억원(693억원, 7.0% 증)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26년) 98.2% → ('27년) 100%

학대피해장애인쉼터·장애아동쉼터 인건비 총괄 관리 사회복지시설 추가

10개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전년대비 4.9% 인건비 증액

□ 주요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 (준수율 100%)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기본급 예산 편성(전년대비 253억원 증)
 - *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노인·아동 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노인·아동·장애인·장애아동 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 인건비 추가 인상을 위한 예산 편성(전년대비 63억원 증)
- (공통처우개선을) '26년 처우개선을 반영한 각 시설별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을 3.9% 일괄 적용(+377억원)
- (시설추가) 인건비 총괄 편성 시설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 2개소 추가(기존 10개소→12개소)

<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

- 고강도 업무에 종사하는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예산 편성('27년 정부안 기준, 11,127명, 2,453억원)
- 정부사업 인건비 공통처우개선율(3.9%) 대비 1%p 상향한 4.9% 인건비 단가 인상 반영

< 처우개선 반영 민간위탁사업 목록 >

연번	세부사업 (내역사업)	인원 '27년 (명)	편성 단가 (천원)	인건비 예산 ('27년 백만원)
1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지원)	2,180	(24시간) 3,354 (주간) 4,227	42,580
2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262	일반) 3,834 (최중증) 2,770	6,934
3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4,388	(센터종사자) 3,576 (위기개입팀) 4,050	95,027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지원)	1,509	3,452	25,642
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48	4,517	1,301
6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아동보호체계구축지원)	653	3,102	18,417
7	중독관리 지원체계 구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지원)	290	3,449	6,001
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직업재활수행기관 지원)	405	(전문인력) 3,040 (훈련지원) 2,532	15,458
9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통합사례관리)	1,059	3,236	20,563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고위험군 발굴·지원)	333	3,525	13,369
계		11,127		245,292

사업 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지원대상)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7년 정부안 기준, 28,326명)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편성

<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

- (지원대상)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 (지원내용) 정부보조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사회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 의료·돌봄은 더 든든하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합니다.

-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6.7% 인상, 월 13만9천원 더 지원(4인가구)
- ▶ 중증장애인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비율 축소,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 지원
- ▶ 위기 징후 포착 시 생계지원 우선지급(30만원)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6조원)」 신설
-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신규 도입
- ▶ 지역의사제(490명) 시행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전문의)' 전국 확대
- ▶ 5극3특 지역 국립대병원 집중 육성
-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인프라 지원 등 역량 강화



모두가 누리는 보건·복지 AX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합니다.

- ▶ 복지·돌봄 로봇 도입·실증 및 R&D 지원
- ▶ 바이오헬스 청년 유니콘기업 육성 및 K-뷰티 경쟁력 강화

- ▶ 전국민 AI 기본의료(일차의료 AX, 환자 중심 AX) 구축
- ▶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및 한국형 의료AI 개발 추진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 ▶ 아이맞이지원금(최대 2천만원) & 아동기본수당(월 20~30만원) 도입
- ▶ 만 18세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 약 4.2만원) 신규 지원
- ▶ 청년 회복지원(+6천명) 및 보건복지분야 청년일자리 2만개 확충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최대 2,700만원) 및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12주)

통합돌봄의 현장안착과 돌봄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 ▶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확대 및 인구감소 지역 공립 「취약지 돌봄센터」 30개소 신설
- ▶ 장애인연금 3급 단일까지 확대(+26.7만명),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9천명)
- ▶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8만개 확충(+2.8만개)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반영